

3일간 5만명 ‘KT 엑소더스’… SKT, 실적회복 신호탄 쏘나

KT이탈 5만명 중 60% SKT 이동
LG U+에 1.3만, 알뜰폰 7000명

SKT, 해킹사고 영향 3분기 반영
4분기부터 본격 실적회복 기대감

KT발 번호이동이 다시 통신시장 변수가 되고 있다. 해킹 사태 이후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겪었던 SK텔레콤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앞세워 반격에 나서면서, 최근 나흘간 KT를 떠난 가입자 5만여 명 가운데 60% 이상이 SKT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 해킹 여파로 빠져나간 가입자 규모에 비하면 아직 회복 국면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5만2661명이다. 이 가운데 61% 이상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이동한 가입자는 ▲SK텔레콤 3만2336명 ▲LG유플러스 1만2939명 ▲알뜰폰(MVNO) 7386명이다.

해킹 사태가 알려지기 전인 3월 SKT에서 KT·LG유플러스·MVNO로 이동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시스

한 가입자는 12만6171명에 그쳤다. 그러나 사태가 처음 불거진 4월에는 이탈 규모가 23만7001명으로 급증했고, 5월에는 44만490명까지 치솟았다. 6월 들어 20만7847명으로 다소 소강 국면을 보였지만,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행된 7월에는 다시 35만2230명이 SKT를 떠났다. 이로써 4월부터 7월까지 누적 이탈자는 123만7568명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KT·LG유플러스·MVNO에서 SKT로 이동한 가입자는 51

만7395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해킹 여파가 실적에 반영된 지난 3분기 SKT는 전례없는 실적악화로 배당을 시행하지 않았다. 당시 SKT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8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은 3조978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 순손실은 1667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T발 번호이동

대란은 SKT는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치며 신년 번호이동 고객잡이에 나섰다. 1월 15일까지 가입한 신규 고객에게는 1만9000원 상당의 쿠폰팩을 지급하며, 3월 말까지 건강검진 최대 49% 할인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 5일부터 9일까지인 T데이 기간에는 치킨, 장보기, 놀이공원 등 실생활 밀착형 할인을 제공하고, 만 13~34세 고객을 대상으로는 0데이를 통해 뮤지컬 및 전시회 초청 등 문화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과거 특정 기간에 해지했던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이전 멤버십 등급과 가입 연수를 복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고객 관리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해킹 여파가 3분기 중 대부분 반영된 만큼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3분기에 해킹 관련 일회성 비용을 대부분 털어냈다는 점에 주목한다. 비용 청산이 끝난 4분기부터는 순증 가입자가 실적에 직접 반영되어 뚜렷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면 2026년에는 영업이익과 배당 모두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양섭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영향은 3분기 실적에 대부분 반영됐으며, 2026년에는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AI·데이터센터(DC)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과 프레스 인플루언스(Pressial Influence) 등 신사업 성과가 실적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AI DC와 AI 사업이 실적에 기여하면서 2026년에는 영업이익과 배당 모두 2024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KT발 번호이동 규모가 과거 이탈한 120만 명의 가입자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대적인 프로모션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실추된 브랜드 신뢰도를 단기적인 혜택만으로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가입자 유입 규모가 전체 실적을 견인하기에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마케팅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꼬집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제2 홈플러스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민주당 정책위, PEF 감독강화 등 내용
한정에·유동수, 각각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업무집행사원(GP)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정에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1일 금융위

원회와 이루어진 당정간담회 논의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이후 단기주의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감독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P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출자 자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잠재성장률 반등, 韓 대도약 원년 돼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신년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사진)이 올해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금의 흐름을 첨단 전략 산업 및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대전환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구 부총리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6년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대도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을 통한 동반 성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연간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개시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코스닥벤처펀드 등 벤처·혁신 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시행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도 조속히 발표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인상

월 최대 8.7만원 오른 459만원

새해부터 수십억원 연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460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올해보다 약 9만원 오른 금액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보다 0.1%p 오른 7.19%로, 직장·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비는 16만699원으로, 전년 15만8464원에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

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전년 8만8962원에서 1280원 오른다.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900만8340원에서 올해 918만3480원으로 17만514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월 보수를 약 1억2700만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지난해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8만7570원을 더 부담한다. 연간으로는 105만840원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현재 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

나 그간 2년 연속 보험료를 동결과 경제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가운데,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6년 1월부터 2025년도 귀속분 연금소득을 신규 반영해 지역 및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고 새로운 연금소득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AI ‘내부 생명력’ 받아들이며 체화해야”

>> 1면 ‘깊은 성찰서 비롯…’서 계속

이어 “AI를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업 진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에 미래가 달려있다”며 “현대차그룹이 다가올 미래에도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유일한 길은, AI를 외부에서 빌려온 기술이 아닌 조직 내부의 생명력으로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기아는 올해도 신차·파워트레인 라인업을 확대하며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생산 전략과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하이브리드-전기차(EV)-내연기관 등 다양한 파워트레

인 라인업을 선보이며 성장을 이어간다. 기아는 올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신규 판매법인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내 중장기 투자계획의 방향성에 대해 정 회장은 “단순히 외형을 키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존 사업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미래를 얼마나 차분하게 준비하느냐이며, 그것이 앞으로 우리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